포장재 등 스티로폴 소비량 첫 감소

생산자재활용책임제 등 요인 작년 10% 줄어
수산물상자 33% 큰 폭 감소

포장용 등으로 사용되는 스티로폴의 소비량이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스티로폴은 모두 26만1,045톤으로 지난 2002년의 29만3,084톤에 비해 10%(3만2,039톤)가 줄었다. 이는 지난 97년 21만8,583톤에서 IMF의 여파로 98년 13만7,482톤으로 떨어진 이후 99년 17만4,4262톤, 2000년 19만4,908톤, 2001년 22만8,065톤 등으로 연평균 12%씩 증가하다 처음으로 판매량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수산물상자의 경우 2002년 9,943톤에서 지난해에는 6,582톤으로 33%(3361톤)가 줄었으며, 농산물상자도 9,894톤에서 7,160톤으로 27%(2,734톤)가 줄었다. 협회는 수요감소의 요인으로 우선 소형 가전제품의 발포폴리스티렌(EPS) 포장재 사용 규제 및 경재 포장재의 사용 증가, 생산자재활용책임제 실시 등을 꼽았다. 식품 및 농수축산물 포장재의 경우 농산물 포장 골판지 상자의 국고보조금제도, 소비자의 소포장 제품 선호, 농협의 골판지 제조공장 직영 등이 수요감소에 한 몫을 담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화재사고 피해에 따른 난연성이 낮은 단열재의 선호도 감소와 다른 재질제품의 공격적 마케팅도 소비감소의 원인으로 평가됐다.

□■ 올해 환경기술개발 예산 급증
작년비 14.8% 늘어 … 첨단기술개발에 집중
환경부, 환경산업 지원도

올해 환경기술개발과 환경산업 육성 예산이 지난해보다 14.8%나 증가, 관련분야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사업비가 850억원이 책정돼 지난해 750억보다 13.3%가 증가하는 등 환경기술개발비와 환경산업육성비가 지난해 1,528억원에서 금년 1,755억원으로 14.8%가 늘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 전체 예산증가율이 3.2%인데 비해 기술개발및 환경

산업육성예산이 두자리 숫자로 늘어난 것은 환경기술 개발을 중시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기술개발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850억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64억 ▲환경정책연구개발 10억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 20억 ▲환경기술실용화 검증 수수료 6억 등이 배정됐다. 특히 정부의 예산에 기업 등이 대응자금을 내 추진하는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은 올해 12개 단위사업 30개 중점분야 기술개발에 예산이 집중된다. 이와함께 환경산업 육성 예산 가운데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3년거치 7년분할상환조건으로 지원하는 700억원을 비롯,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을 돕는 예산도 5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이밖에도 녹색GDP 도입을 위해 3억원, 환경지표제도 개발운영에 5억5,800만원,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에 12억원이 각각 편성, 집행된다.

□■ 음식물쓰레기 이용 버섯재배 상용화
삼성에버랜드 연간 처리비 1억8,000만원 절감

에버랜드가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버섯 재배에 성공해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에버랜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염분에 강한 버섯균주를 이용한 음식물 자원화 기술을 개발,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에버랜드는 지난 2002년 7월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지면적 1,962평, 연면적 518평(2층) 규모의 음식물자원화센터를 건립했다.

이에 따라 에버랜드 파크에서 발생하는 연간 1,300톤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약 1억8,000만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퇴비화나 사료화 시설 운영에 따른 2차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에버랜드측은 설명했다. 에버랜드는 음식물자원화센터에서 생산되는 느타리버섯은 식품의 안정성은 물론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단체급식용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버섯재배 폐배지도 농림부 퇴비화 공정규격과 환경부 부숙토 기준에 적합해 유기질 비료원료나 기능성 사료로 상품화할 계획이라고 에버랜드는 밝혔다.

□■ 음식물 처리기 관련 허위광고 기승
일반가정 설치 의무 없어 … 분리배출 당부
환경부, 대형급식소 등 설치 의무화

음식물 처리기기에 대한 허위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환경부가 이에 속지 말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26일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판매업체에서 오는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조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광고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2005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을 금지됨에 따라 시, 구 · 군은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이나 퇴비, 사료 처리후 잔재물만 반입해야 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시 지역 이상의 자치단체장이 준수해야 할 사항이며, 일반 가정에서는 현재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넣어 지정된 곳에 배출하거나,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객실면적이 100m² 이상인 음식점이나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는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운영자 등에게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병 뚜껑이나 수저, 견과류의 껍질 등은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 재래시장 생쓰레기 80% 소각 · 매립
분리배출 7% 불과 … 수거시스템 도입 필요

재래시장에서 발생하는 야채 껍질 등 생쓰레기의 대부분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쓰시협)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서울시 소재 100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생쓰레기의 배출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82개소가 생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은 채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생쓰레기를 분리배출한 곳은 단 7곳에 불과했으며, 11곳은 음식물쓰레기와 혼합해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쓰시협은 다량으로 발생하는 재래시장 등의 생쓰레기에 대한 배출수거시스템을 마련해 생쓰레기가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와 섞여져 매립지나 소각장에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지자체 생활폐기물 예산자립 '난망'
수수료징수액 처리비 28% 불과 … 인건비 42% 지출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수수료 징수액은 생활폐기물 전체 관리예산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2002년 자치단체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관리예산은 모두 1조9,704억원으로 수집 · 운반 등 처리비 1조6,087억원, 시설설치비 3,617억원으로 집계됐다. 처리비용의 경우 인건비가 6,771억원으로 처리비용의 42.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위탁처리비는 5,533억원(34.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시설운영비(935억원), 차량운영비(364억원), 장비구입비(354억원)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비교적 적었다. 생활폐기물 분야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쓰레기수수료 징수액은 모두 4,451억원으로 수입 · 운반 등 처리비의 2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의 경우 불과 20.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반면, 인천의 경우 47.5%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소각 · 매립장 반입 80% 재활용 가능
음식쓰레기 · 종이 · 플라스틱 등 … 전처리시스템 도입해

소각장과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의 80% 이상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인 것으로 나타나, 자원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쓰시협)는 지난 9월 25일부터 5일간 소각장 4개와 매립장 2개소에 반입되는 종량제봉투를 조사한 결과 반입되는 쓰레기의 81.5%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었다고 지난 달 2일 밝혔다. 특히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경우 85.9%에 달했으며, 소각장도 65.0%에 이르렀다.

종량2제 봉투 속의 재활용 가능자원은 쓰시협이 지난 5월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 소각장의 경우 성상조사에서는 4.2%, 매립장은 4.2%가 각각 증가한 수치이다.

재활용가능 자원의 종류별로는 음식물쓰레기가 소각장과 매립장에서 각각 23.3%, 21.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각장에서는 종이류(17.5), 매립장에서는 플라스틱 포장재(19.1%)가 그 뒤를 이었다.

제주 산복 소각장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의 비율이 45.4%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도 군포 소각장은 전기전자제품 1.6%, 병원감염성폐기물 7.6%, 기타 유해폐기물 2%로 총 11.2%의 유해폐기물이 반입돼 그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왔다. 쓰시협은 재활용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세밀한 분리수거체계 구축을 통해 배출단계에서 재활용가능 자원을 분리하고, 처리시설 입구에도 재활용가능자원과 유기성폐기물을 분해할 수 있는 전처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합성수지 대체도시락용기 판매망 구축
펄프 · 갈대 등 재질 … 1회용품 줄이기 기여 기대

합성수지를 대체할 수 있는 도시락 용기 판매망이 구축됐다.

환경부는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를 대체하는 대체도시락용기 판매망이 구축, 도시락용기를 이용하는 수요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해 11월 말에 밝혔다. 합성수지 도시락 대체용기는 펄프와 갈대용기, 종이용기 등으로 만들어진다.

농협을 중심으로 한 대체용기 판매망은 전국의 시 · 군 · 구마다 1개소 이상의 유통판매망이 구축됐으며, 대

구 동아백화점도 대구와 포항 구미지점 등 8개 사업장이 대체용기 판매에 참여하고 있다. 환경부는 대체도시락 용기 판매망이 형성돼 수요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재활용 분리배출표시 업계 참여 저조
참여율 26% 불과 … 동물용의약외품 · 렌즈용품 0%

올해부터 시행되는 분리배출표시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는 표면에 분리배출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 이치범)는 내년부터 분리배출표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13일부터 나흘동안 서울시내 백화점 · 대형매장 6곳을 대상으로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 · 포장재를 일제히 점검한 결과 호응도가 낮았다고 밝혔었다. 지난해9월과 10월 두달간의 조사에서 6,980개 점검제품 중 26.3%에 해당하는 1,834개 제품만이 분리배출표시를 부착해 유통하고 있을 뿐, 73.7%에 이르는 품목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약외품류와 농수축산물류는 각각 91.1%와 76.2%가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48개 제품을 점검한 벌꿀류를 비롯해 알류(24개), 동물용의약외품류(8개), 렌즈용품류(2개) 등은 조사대상 모두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았다.

콩가공식품류(48.5%), 주방세제류(47.6%), 반찬류(46.6%), 유가공품류(46.1%) 등은 상대적으로 표시제품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원재생공사는 분리배출표시 부착률이 저조한 요인으로 제도 시행 전에 출시된 제품의 유통을 꼽고, 대부분이 업체가 제도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에 동참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 한국자원재생공사 「재활용기술지도사업」실시

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 이치범)는 중소재활용업체들의 기술력 및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재활용기술지도사업」을 이번 년도 1월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재활용기술지도는 재활용업체로부터 접수된 애로사항을 각 분야별 학계, 연구소 등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현장 기술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서, 공사는 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재활용업체로부터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력 풀(POOL)을 확대 구축하고 있다.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기술지도를 받은 업체들은 현재, 지적소유권 16건을 획득하는 등 생산공정의 자동화,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공사는 밝혔다.

재활용기술지도사업 지원업체로 선정이 되면 6개월 이내의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의 85%는 공사에서 무상 지원한다. 1회 지원 한도액은 1천 5백만원까지이며, 폐기물을 이용하여 중간제품 및 완제품을 제조하는 재활용사업자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환경부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30일 제244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95년 1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제정 · 시행중에 있으나, 1998년 1월 법 개정 이전에 설치 · 운영중인 일정규모 이상의 소각장 및 매립시설은 동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당해 시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어려움에 따라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법 제정 이전에 설치 · 운영중인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도 당해 시설로 인해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주민들에 대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편익시설 설치 및 복리증진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998년 1월 1일 당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이었던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 의무화(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 고시하여야 함), 금치산자나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등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동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하는 절차가 남아 있으며,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2004년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 환경마크 · 일본 에코마크 상호인정협정 □■ 체결

국내 친환경제품 일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환경마크협회(회장 이상은)는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 도카이대학 교우회관에서 일본 에코마크(Eco Mark)제도 운영기관인 일본환경협회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한 · 일 환경마크 상호인정협정 조인식에는 환경마크협회 이상은 회장과 일본환경협회 Mutsumi Kato 회장이 참석하였으며, 상호인정협정의 효과적인 실행방안과 양국간 교류협력 강화방안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마크 상호인정협정은 상대방 국가의 환경마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국제품에 대한 인증신청 및 인증기준 준수여부의 검증업무를 각국에서 상호 대행하는 것이 협정의 내용이었다.

즉,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 에코마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나라 환경마크협회에 신청을 하면 환경마크협회에서 해당제품의 환경성을 검증하여 일본에 그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일본 에코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1989년 도입된 일본 에코마크제도는 독일 블루엔젤과 함께 국제적으로 가장 활성화된 에코라벨링(eco-labelling)제도로서 2003년 12월까지 5,600여개의 사무기기, 생활용품, 의류 등 다양한 친환경제품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였다. 일본 에코마크는 일본 소비자 및 생산자의 성숙한 환경의식에 힘입어 활발한 운영성과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인지도가 높다.

환경마크협회는 2002년 9월, 대만 · 태국 및 2003년 7월 중국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이래 2003년 12월 일본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아시아 국가간 환경마크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향후 유럽 및 미주지역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7차 신기술(NT), 우수품질(EM) 및 우수 □■ 재활용(GR) 인증서 수여식 개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 윤교원)은 지난해 12월, 기술표준원 중강당에서 제7차 신기술(NT:Korea New Technology), 우수품질(EM:Excellent Machine, Mechanism & Materials) 및 우수재활용(GR:Good Recycled)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수여 대상은 41업체 41품목으로, NT(신기술인증) : 15업체 12품목, EM(우수품질인증) : 27업체 27품목, GR(우수재활용인증) : 1업체 2품목이었다.

이번 인증으로 NT(신기술인증)는 총 578건, EM(우수품질인증)은 총 900건, GR(우수재활용인증)은 총 202건을 인증하게 되었다.

□ GR인증(2건)

인증번호	인 증 명	업 체 명	대표자	해당과	담당자
2003-027	재활용재를 이용한 수목보호 덮개 및 받침틀	(주)일산금속	이상종 (충북 청원)	건설 서비스과	장요한 (7402)
028	재활용 골재 도로용 측구 뚜껑	(주)일산금속	이상종 (충북 청원)	건설 서비스과	장요한 (7402)

□■ 기아자동차 2003 환경 · 사회보고서 발간

기아자동차는 최근 2003 환경사회보고서를 발간하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환경적 · 사회적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환경경영팀은 2000년부터 기업의 환경보전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고서를 환경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대내적으로 제작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이번에 국제적인 지속가능보고서의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기준을 적용한 2003 환경 · 사회보고서를 발간하여 대내외적으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의 활동을 고객, 종업원, 지역사회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기아자동차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가장 활발한 활동의 하나임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로 환경보전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고 있다.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이번 환경 · 사회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앞으로도 환경경영의 선도기업으로서 사회적, 생태환경적, 경제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수도권매립지 환경상 영향조사 본격 착수 연세대, 인하대를 공동 용역수행기관으로 선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박대문)는 제2매립장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수행기관으로 연세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소장 서용칠 교수)를 선정하고, 주민지원협의회가 추천한 인하대학교 환경연구소(소장 조광명 교수)와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제2매립장에 대한 환경상 영향조사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정기적(3년)으로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제2매립장이 매립개시한 날(2000년 10월 13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용역기간은 올 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15개월이며, 4억원의 예산을 들여 환경기초자료조사, 대기 · 수질 · 악취 등 9개 분야에 대한 환경질 측정, 환경피해 현황조사, 주민 설문조사 등 전반적인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환경상 영향조사는 ′96년 12월 21일 최초 실시한 이후 약 8년만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이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의 영향등급 및 영향권역의 조정 등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상 영향조사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되고 있다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전했다.

※ 현행 영향등급 : 최저 2.58~최고 49.8
영향권역 : 매립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 내외

□■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환경부는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관련하여, 최근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 현재와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판매업체에서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책자료로 내놓았다.

음식물쓰레기를 바로 매립할 경우 악취, 해충, 침출수 발생 등으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므로 정부에서는 1997년도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특별시 · 광역시 또는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 · 퇴비화 · 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을 매립토록 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거나 재활용시설 설치 또는 민간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동 제도는 시(市) 지역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준수해야 할 사항이며, 일반 가정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바 대로 현재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넣어 지정된 곳에 배출하거나,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배출하면 된다. 즉,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객실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이나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는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동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가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의 제3호라목(2)의 규정에 의한 수분함량을 감량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리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하여 소각하거나,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하수병합처리 등 기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배출시 병 뚜껑, 수저, 견과류의 껍질 등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하여야 한다.

□■ 감폐물 자원화 협회 설립 가칭 "의료폐기물 자원화협회" 로 첫 출범

가칭 "의료폐기물 자원화협회"로 첫 출범한 이 협회의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중인 업체는 서울 소재의 경북상회와 중앙상사, 복산상사 등이며 이들이 주축을 이뤄 협회 설립에 따른 당국의 협조를 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들은 독과점에 준하는 일각의 편견에 대해 공정위의 자문아래 부정적인 눈총을 쇄신하는 등 뒷전으로 치부된 이미지 부각을 꾀할 계획이다.

1차 의료폐기물 자원화협회에 이미 30여 개 단체와 적지않은 회원이 가입했다.

일부 제약회사의 경우 기존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난항을 겪어온 일련의 감염성폐기물 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전하고, 지역 주민들은 의료폐기물의 개념정리를 두고 재활용품의 수집·수거관련 사업을 관장하려는 캠페인성 추진사업으로 구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외국의 정보수집과 조사를 벌여 심도있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부대사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종이냅킨·종이키친타올·과연 안전한가 기술표준원, 유해물질 관리기준 KS규격으로 제정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윤교원)은 삶의 질 향상과 외식문화의 확산으로 가정이나 식당 등에서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종이냅킨과 종이키친타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해 유해물질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새로이 한국산업규격(KS)으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기술표준원은 이번 KS규격 제정을 위해 국내외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의 함량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그 결과 형광증백제와 수은(Hg), 납(Pb), 카드뮴(Cd) 등의 중금속 성분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종이냅킨과 종이키친타올 제조에 소량이긴 하지만 재생펄프 원료나 인쇄 잉크의 사용으로 인해 일부 제품에서 미량 검출된 바 있는 PCB(Polychlorinated biphenyls)와 포름알데히드(HCHO) 등의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도 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 유해물질의 기준치는 PCB의 경우 5㎎/㎏이하, 형광증백제와 포름알데히드는 검출되지 않을 것, 중금속 성분은 각각 1㎎/L이하로 KS규격 제정(안)에서 정하고 있고, 유해물질의 시험·분석방법은 국제표준으로서 객관성이 확보된 ISO규격과 이를 부합화한 KS규격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KS규격 제정으로 유해물질이 없는 우수한 품질의 종이냅킨과 종이키친타올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하면서, 지난해 12월중 관련 공공기관, 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종이냅킨과 종이키친타올의 KS규격 제정(안)에 대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제정 예고하여 올해 초에 제정 고시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KS인증심사기준도 제정 공고하여 KS인증 신청을 받아 KS인증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도록 할 예정이다.